

##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8월 23일 화요일 11시
- 장소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 주최 : 중대재해 대응기구 발족 기자회견

### 1. 발족 기자회견 프로그램

- 발언 1.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발족 취지 및 계획 : 민주노총 이태의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발언 2. 중대재해 무력화 시도 규탄 및 중대재해 대응 투쟁 결의 :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이용관 님(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 발언 3.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엄정 수사 및 처벌 촉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영선 회장(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 발언 4. 중대재해 대응기구 발족 기자회견문 낭독 :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발족 선언문

####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발족 선언문

1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처벌법)이 시행되고 7개월이 지났다. 법 제정에 나섰던 노동·시민사회와 산재·재난 참사 피해자들은 기업의 최고책임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경영 방침을 다시 세우고 예산, 인력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 기업들과 경총, 중기중앙회 등 경영계가 보여준 행보는 이와 정반대였다. 법 시행을 앞두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최고안전책임자(CSO)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노동부 출신 관료·대형 로펌 법 기술자들과 범망을 빠져나가는 방법을 찾는데 골몰했다. 중대재해 예방 대책 마련은 방치하면서 정부 정책 기조가 처벌보다 예방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경총 등 경영계와 목소리만 경청하며 경제 위기 타파를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끊임없이 처벌법 개악 의지를 피력해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새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현장에서부터 노동부, 검찰까지 영향을 미쳤다. 처벌법 위반으로 14건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단 한 건만 기소 되었을뿐이다. 심지어 유일하게 기소된 사건과 동일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대흥알앤티 최고책임자에 대해서는 서류상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갖췄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법 적용 1호 사건으로 노동부 수사, 특별근로감독 결과, 언론 보도를 통해 법 위반 상황이 명백하게 드러난 삼표산업 최고책임자가 여전히 기소 되지 않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다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법 제정에 나섰던 노동·시민사회와 산재·재난 참사 피해자들은 처벌법이 현장에서 ‘종이 호랑이’로 전락 될지 모른다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다시 모여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를 발족한다.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는 지역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현안에 대응하고 연대 지원하는 체계를 가동할 것이다. 중대재해 대응 투쟁으로 최고책임자를 처벌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통해 중대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경총 등 경제계의 법안 무력화 시도를 저지하고,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 운동에도 나설 것이다.

-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다 범죄자를 처벌하라!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고 즉각 개정하라!
- 중대재해 대응 투쟁으로 최고책임자 처벌하고 노동자 시민 안전 쟁취하자!

2022년 8월 23일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 3.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사업 및 운영 계획

<p>1. &lt;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gt; 사업 계획</p> <p>1) 사업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대재해 현안에 대한 연대 및 지원</li> <li>- 지역별 중대재해 대응체계와 공동 대응</li> <li>- 중대재해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li> <li>-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 관련 대응 및 법 개정 운동</li> </ul> <p>2) 사업 계획</p> <p>(1) 현안 중대재해 대응 및 지원 연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중대재해 대응 및 지원 연대 활동</li> <li>② 지역별 중대재해 대응 기구와 활동 연계</li> </ol> <p>(2) 내부 역량강화 사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중대재해 대응 사례 발표회</li> <li>② 중대재해 법률 대응 방안 워크숍</li> <li>③ 피해자 유족지원 사례발표 및 세미나</li> </ol>
---

(3) 정책 및 언론사업

- ① 주요 중대재해 발생 및 법 집행 관련 입장 발표
- ②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집행 모니터링, 조사 및 개선 요구 사업
- ③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응 사업

2. 중대재해 대응기구 조직 체계 및 운영

1) 공동 대표단

- 노동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시민사회 :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영선 회장
- 산재피해자 :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이용관 아바님
- 시민재해 : 추후 논의하여 결정 예정

2) 집행위원회

- 집행위원장 : 민주노총 이태의 노동안전보건위원장(부위원장)
- 집행위원회 : 김용균재단, 민주노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산재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일과건강, 정의당, 한노보연, 참여연대, 지역 중대재해 공동 대응 기구 집행위원장

3) 집행팀

(1) 중대재해 대응팀(민주노총 정재현 노동안전보건부장)

- 중대재해, 현안 대응, 공동 대응 지원 연대 활동 등

(2) 정책팀(정책팀장 : 추후 논의 예정)

- 중대재해 발생 이후 수사, 기소, 재판 진행 건에 대한 포괄적인 모니터링 및 진행 대응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운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수사 상황 및 처벌 결과 등에 대한 입장 발표 등

4) 지역별 중대재해 대응 기구

- 경기, 인천, 대전, 충북, 세종충남, 광주, 전남, 부산, 울산, 경남 지역과 소통중
- 중대재해 대응기구 지역 체계 혹은 지역 중대재해 사업단이 대응기구에 참여하는 방식을 활동

5) 중대재해 대응 지원풀(pool)

(1) 법률 대응

- 중대재해 현안 법률지원, 유족 지원
- 수사, 기소, 재판 등 중대재해 관련 전반적 법률 진행에 대한 대응 사업

(2) 피해자 지원

- 장례식장 방문, 유족 간담회,
- 기자회견, 정부 면담 참여 등

(3) 안전보건 지원

- 중대재해 진상규명, 작업중지, 안전보건진단명령 등 중대재해 대응 시 현장 지원 및 자문

(4) 시민사회 연대

#### 4. 발언문

생명안전사회를 위한 힘찬 투쟁의 불길을 다시 지피며

이용관(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산재와 재난 참사 피해자와 가족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7개월이 지났는데도 안전하지 않은 일터와 사회에서 노동자와 시민의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않고 연일 보도되는 중대재해 소식을 들으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지만,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미적거리고 있어 참담한 심정으로 또다시 신발끈을 동여매고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한 투쟁을 결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처벌법을 제정하기 위해 자식을 잃은 유가족까지 국회 앞에서 단식투쟁을 하며 싸울 때도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재계와 정권의 집요한 법제정 반대에 몰두하는 견고한 동맹에 치를 떨었었는데, 재계와 가진 자들을 위한 반노동/친재벌 정권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윤석열정권은 당선이 되기도 전부터 재계와 정권이 합작하여 마각을 들어내고 처벌법 무력화 시도가 너무도 악랄하여 치떨리는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야 바뀌는 사회는 후진적인 나쁜 사회입니다. 게다가 사람이 계속 죽어도 바꾸지 않은 사회는 야만적이고 폭압적인 사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데도 재계와 정권은 1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 획책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은 누구를 위한 정권입니까?

참으로 분노가 치솟아 우리는 투쟁을 위한 발걸음을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가 법이 시행되면서 해소되고 지난 7개월 동안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늘 중앙의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를 출범하고 이어 각 지역별로 지역운동본부가 출범하게 될 것입니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는 처벌법 제정 취지에 맞게 일터와 사회에서 사람이 죽지 않고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중대재해가 일어나는 현장에 달려가 신속하게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고, 기업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체제를 갖추고 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후안무치한 재계와 정권의 처벌법 무력화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아울러 법제정과정에서 눈물을 삼키며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사업장에 처벌법 적용과 경영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 투쟁에 매진할 것입니다.

오늘 출범 기자회견은 단순히 출범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투쟁을 선포하고 다시는 일터와 사회에서 사람이 죽지 않는 생명안전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결의하고 선포하는 자리이며, 강

고한 연대와 투쟁을 다짐하는 선언과 결의의 장입니다.

저희 피해자운동단체와 유가족들은 죽음의 행렬이 멈출 때까지,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고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가 필요 없을 때까지 시민사회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